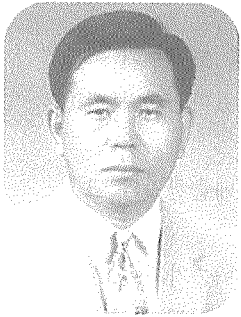


폐기물 예치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시급



박 재 인
(본회 진흥담당 상무)

지금 우리 전자산업에 있어 가장 큰 현안은 폐전자제품의 회수처리체제를 합리적으로 구축해 계속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근본적으로 시급히 개선하는 것이다.

폐기물 예치금제도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최대한 재자원화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제조자(수입자를 포함한다)에게 소정의 예치금을 납부토록 한 후 회수처리한 분에 대해서는 그 예치금을 반환해주는 제도로써 1991년에 도입, 그 이듬해부터 시행해 왔다.

현재 우리 전자산업에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룸에어콘 등이며 납부해야 할 예치금의 요율은 kg 당 38원씩으로 연간 약 100억원씩을 부담하고 있다.

작년까지 지난 8년동안 우리 업계가 납부한 예치금은 모두 약 601억원이며 이 가운데 회수처리를 통해 반환받은 예치금은 전체의 6.3%인 37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64억원은 타용도의 환경특별회계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이 납부한 예치금이 남아 타용도로 전용하고 있으면서도 환경당국은 환경보존의 중요성과 회수처리율(예치금반환율 6.3%)이 낮다는 것을 내세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그 요율도 인상코자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전자산업이 뿌리조차 남아있지 못할 정도로 그 부담이 막중하게 커진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폐전자제품을 회수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자원화(Recycling) 시설이 필요한데 이것을 갖추어 주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외면하고 있어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격으로 우리 업계가 고객들의 요구와 예치금의 반환을 위해 재자원화 시설에 막대한 투자까지 하게됨으로써 이중, 삼중의 부담을 해야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원래 폐기물 예치금제도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에 의해 시행돼온 제도로써 제조자가 생산제품의 폐기물이나 포장물을 회수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 예컨대 제지업계의 폐지나 음료업계의 공병 등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버려진 폐기물이나 포장물을 효과적으로 회수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자를 돕기 위한 유인제도로 운용해 그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폐전자제품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아무 곳이나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제조자가 그것을 회수한다 해도 바로 다시 사용할 수도 없어 세계 어느 나라도 전자산업에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폐기물 예치금 제도는 제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도와주기 위한 유인제도라기보다는 제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사실상 의무화시켰다는데 문제가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 회수 처리의 기본적인 책임은 폐기물을 배출한자와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오늘날 대량생산 소비시대를 살아오면서 폐기물의 배출이 급격히 증가되어 지구환경을 파괴하기 시작함으로써 인류의 삶 자체를 위협함에 따라 제조자로서도 당초의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환경보존에 대한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조자가 어떠한 형태로 환경보존과 재자원화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산업과 그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자산업은 첫째, 전형적인 기술 및 연구집약형의 산업이므로 제조자로서는 환경보존과 재자원화가 용이하도록 처음부터 제품을 개발, 생산,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이른바 친환경 제품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로, 전자제품은 마치 자동차와 같이 다종의 부품들로 조립되어 폐전자 제품의 회수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분해, 분리한 후 재자원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인가에 의해 재자원화 시설을 구축해야 처리가 가능하고 또 처리가 가능해야 회수 운반도 원활하다는 것이다.

셋째로, 폐전자제품은 자동차에 비해 재자원화의 경제성이 낮고 부피와 중량이 커서 회수운반의 비용이 높아 회수처리를 시장기능에만 맡길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비용을 합리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전자제품은 대부분 가정으로부터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므로 신제품 판매의 역투트를 이용하면 폐기물의 회수는 폐지 등에 비해 비교적 용이하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동안 우리가 전자산업에 폐기물 예치금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것은 환경보존에 대한 의욕은 높ی 살만 하지만 이치에는 전혀 맞지 않는 제도로 비용의 부담만 증가될 뿐 회수처리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동안 우리는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환경당국에 수없이 많이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항상 환경보존의 명분때문에 뒤로 물러서야만 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폐전자 제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수 재자원화 하기 위해서 폐기물 예치금제도를 폐지하고 제조자는 개발에서 생산단계까지 각 공정별로 환경보존 및 재자원화의 사전평가제를 도입해 처음부터 환경보존과 재자원화가 용이하도록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당지역의 폐기물 재자원화 시설을 구축토록 한 후 쓰레기처리 종량제 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부담하는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이용해 재자원화 사업자로 하여금 판매자의 도움을 받아 이를 회수, 재자원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자원화 시설구축에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는 정부가 우선 재정으로 보조하고 부족할 경우 제조 및 수입자로 하여금 지원토록 하며 정부는 또한 재자원화 사업의 경제성 규모를 고려해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최적의 재자원화 시설을 구축토록 조정해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자원화 시설의 부지만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조자와 수입자가 재자원화 시설에 투자를 해서 폐전자 제품을 회수, 재자원화 하는 방안도 차선택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로 인해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수도권의 재자원화 시설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 가능한 이때 전자산업에 대한 폐기물 회수, 처리체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 동안 우리 인류는 대량생산 소비의 공업화 사회를 살아오면서 풍요와 편의를 누리왔지만 이제 그 역기능으로 지구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해 인류의 삶 자체를 위협하고 있어 환경보존이 인류공동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쓰레기, 즉 폐기물을 배출한 자는 물론 그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등)들까지도 그 회수, 처리에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국제 사회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소비자들로부터 규제와 압력을 받으면서 살아나갈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민적 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특정계층에 회수처리의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산업과 폐기물의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해 각계간에 역할이 합리적으로 분담되도록 조정해주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 고도정보화의 새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전자산업의 가장 큰 현안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 지속적으로 수출증대와 기술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